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2/ 11/ 16 통권 1597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중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CEO는 고객 소망에 부응한다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매출여유 · 매출할인은 수익에서 차감하고, 세무상 과세표준에서도 제외된다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자영업자의 창작품 판매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해당함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청년창업자의 법인설립 절차에서 결정 요소와 주의점〉

개념, 요소	핵심절차, 기본사항	주의점 등
법인 결정	신규사업 위해 개인사업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결정(법인은 유한책임)	기존 법인 인수합병 주의
사업 목적	업종, 업태 등 결정(단기, 중기, 장기적 사업방향 미리 기재가능)	가능하면 구체적
회사명	본인 성명, 사업특성, IT온라인 특성 등 고려해 작명(근접지역의 동일상호 불가)	인터넷 등기소 중복검색
주소결정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공유오피스, 주택 등 특정장소(본점소재지임)	복수등록사무실 가능
설립임원	소형법인 대표자1인이사 가능, 통상은 2인(주주+비주주 등)	내부감사는 생략 가능
자본금	창업을 위한 임차보증금, 기본설비 해당금액(최소 100원부터 가능)	자본금 규제 없어짐
설립준비물	설립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자본금 불입한 대표자의 은행계좌 잔고증명서(일반 이사는 일반도장)	등기시점까지 잔고 유지
설립비용	자본금 등록세(0.4%, 대도시내 3배 중과), 교육세, 인지대, 정관 이사회 이사록 작성 등	법무사 수수료 1백만원
사업자 등록	법인설립등기(1주일 소요)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등기부등본, 정관,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등 : 2일 내 등록 확인)	홈택스 온라인 가능
사업개시	인력채용, 원부자재 매입, 광고홍보판촉, 매출발생, 부가세 신고 등	회계사무소 복식부기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사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 ▶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97호 / 주간 46호

2022. 11. 16. (수)

· 발 행 인 : 이 윤 연
· 제 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정전략	청년창업자의 법인설립 절차에서 결정 요소와 주의점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절차 흐름도	2
C E O 에 세 이	CEO는 고객 소망에 부응한다	3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매출 영세율 기타 부가세 신고 문의 - 톨비 대납분 정산 -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 무역조건 변경시 매입처 매출인식에 대한 문의	5 6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매출에누리 · 매출할인은 수익에서 차감하고, 세무상 과세표준에서도 제외된다	7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주택분 중부세 개정안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	9 10
직 장 인 Survival	일 잘하는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기술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재산-626, 2022.02.25) -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2018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고, 2019 및 2020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2019 및 2020사업연도에 대하여 투자제외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사전법규법안-232, 2022.03.30)	12 13
세 정 뉴 스 와 해 설	주택분 중부세 120만명 돌파...5년새 3.6배 증가	14
마케팅 Tax consulting	자영업예술가의 창작품 판매에 따라 발생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해당함	12
세 무 정 보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15 25
회 계 정 보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29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절차 흐름도 (국세청 자료)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 양수 컨설팅
(829-7575)

수행자	일정	일괄제공 이용 절차 및 유의사항
회사	'22.10.27. ~'22.11.30.* *부득이한 경우 '23.1.14.까지 수정· 신규 등록 가능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 일괄제공 압축파일 해제시 사용할 비밀번호 설정 가능 ◦ 기장 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 자료 제공 가능
근로자	'22.12.1. ~ '23.1.19.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홈택스에서 최초 1회 확인(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동의) 화면으로 자동 안내 ◦ 확인(동의)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 올해 초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 없음 ◦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간소화자료는 삭제 가능
국세청	'23.1.21.~	◎ 일괄제공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가 '23.1.14.까지 등록한 근로자로서 '23.1.19.까지 일괄제공에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
회사	'23.1.21. ~ 3.10.	◎ 간소화자료 PDF 압축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DF 압축파일 한개 용량을 최대 5GB(약 2만 5천여 명) 제공 ◦ 기존 등록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일괄 제공 ◦ 국세청이 제공한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후 최종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

CEO는 고객 소망에 부응한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서울 제기동 청량리 청과시장 뒤편의 식료, 제과, 잡화, 휴지 등 도매시장. 10m 정도의 널찍한 도로를 사이에 두고 가게 수십 개가 늘어서 있다. 가게마다 생필품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제조업체 직원들은 이곳에서 일반 소매점이나 할인점에 들어가는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에 물건을 넘기고 현금을 받아간다. 이른바 ‘땡처리’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깡통시장’, ‘도깨비 시장’, ‘무자료 시장’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지난 연말 이후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매출 감소를 우려한 업체들의 덤핑이 극성을 더해가고 있다. 물건이 팔리지 않아도 월 판매 목표량 때문에 할 수 없이 땡처리를 한다. 이 과정에서 무(無)자료 거래도 공공연히 행해진다.

이러한 땡처리 시장이 비단 식료와 잡화에 국한되지 않고 의류와 가전제품 등까지 횡행한다. 그래서 유통시장이 흐려지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킨다. 이는 정상제품의 가격을 인하할 소지가 줄어들게 만들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수요초과에서 공급과잉시대

수요 초과에서 공급과잉으로 시장상황이 변했다. 따라서 기업은 저렴하고 신속하게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해야 고객 만족을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생존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신속히 개발, 적정량 생산에 연결하는 제품 개발 프로세스 즉 동시개발(Concurrent Engineering, CE)이 중요하다. 또 이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원하는 곳에 공급할 수 있는 수주·출하 프로세스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프로세스가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으면 왕왕 헛발질을 하게 된다. 고객의 니즈(Needs)를 적시에 파악하기 어렵고 생산, 출하를 재빨리 대응치 못한다. 때문에 험값으로 땡처리가 이루어져서 결국은 기업이 주저앉게 된다. 이러한 모든 경영의 과정 속에서 그 중심에 CEO가 있다. 따라서 CEO의 고객을 헤아리는

마음가짐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생산마인드보다고객마인드중요

그것이 바로 마케팅 마인드다. 생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이고 고객이란 뜻이다. 또 단순히 팔아치우는 것과 다른 이념적 특성이 있다. 첫째, 나 중심태도(I Attitude)에서 당신 중심태도(You Attitude)가 되어야 한다. 일테면 ‘50주년 세일’은 냉철히 보면 고객과 하등 관련이 없는 기업만의 일이다. 그런데 버젓이 그런 어리석은 기업의 이벤트가 지금도 눈에 뜨인다.

그것보다 ‘당신 생일의 꽃다발’이 고객으로는 요긴한 것이다.

둘째, 공장에서 시장으로 사고의 출발점이 옮겨져야 한다. 한 때 기술자 ‘곤조’라는 말이 있었다. 공장기술자들이 어리석기 짝이 없이 떼쓰는 것을 이른 말이다.

셋째, 제품을 팔아 치우는 게 아니라 고객의 니즈(Needs)와 소망(Wants)에 부응하여 만족을 선사해야 한다. 그것이 핵심이다.

넷째, 기업의 성과는 판매를 위한 이윤추구가 아니라 고객과 함께 만족을 공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업의 이익도 자연스레 고객 만족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1월 4일(금)	11월 7일(월)	11월 8일(화)	11월 9일(수)	11월 10일(목)
미	달 러 (USD)	1422.10	1422.40	1406.50	1387.30	1368.30
일	본 엔 (JPY)	959.39	967.85	959.12	952.75	934.22
영	국 파 운 드 (GBP)	1587.77	1611.22	1619.23	1601.22	1554.25
캐	나 다 달 러 (CAD)	1034.71	1052.07	1042.04	1032.79	1011.38
홍	콩 달 러 (HKD)	181.16	181.20	179.18	176.74	174.32
중	국 원 (CNH)	193.88	194.89	194.62	191.37	188.42
유	로 화 (EUR)	1386.62	1412.30	1409.31	1397.70	1369.67
호	주 달 러 (AUD)	894.64	915.03	910.71	902.16	879.41
싱	가 폴 달 러 (SGD)	1000.32	1009.47	1003.60	991.67	975.51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99.75	299.58	296.76	292.90	291.66

매출 영세율 기타 부가세 신고 문의

Q 매출 영세율 중 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1. 용역 매출(인보이스) 2. 직수출(필증) 이 있는 경우,

1. 용역 매출(인보이스)는 매출부가세의 영세율 기타에 기입되며, 영세율 첨부서류에 인보이스를 증빙으로 첨부하고, 수출실적 명세서의 아래 리스트는 하지 않으나 기타 영세율 적용란에 기입되어야 하나요?
2. 이전의 용역매출(인보이스)를 영세율 첨부서류와 인보이스만 제출하고 수출실적명세서를 누락했다면 이전 것도 수정신고 진행 해야 하나요? 패널티가 있나요?
3. 매출 부가세의 영세율 기타 (세금계산서발급분X) 에 기입되는 항목은 직수출 (필증) , 용역매출(인보이스) 가 있을때, 두항목 모두 영세율 첨부서류 와 수출실적 명세서가 작성되어야 하는건가요? 필증이 있을 경우는 영세율 첨부서류 시 추가로 낼 증빙은 없는건가요? 현재 용역매출은 인보이스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A 국외에서의 용역매출은 용역공급계약서나 외화입금증명서가 영세율 첨부서류이며 수출실적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수출실적명세서도 영세율 첨부서류 중 하나로 직수출시에 작성하시면 되며, 용역매출시에는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톨비 대납분 정산

Q 차량운전 용역서비스를 하는 업체에서 톨비를 먼저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증빙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도로 통행료 대납분에 대한 청구를 받아 지급하시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납부영수증을 증빙으로 받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 Q** 임대차 계약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간이 아래와 같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 문의드립니다
1)8/24~9/14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8월로 해야하는지 9월로 해야되는지 여부
2)9/15~/10/14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9월로 해야하는지 10월로 해야되는지 여부
- A** 용역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이 세금계산서 발급일이지만,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주고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됩니다.

무역조건 변경시 매입처 매출인식에 대한 문의

- Q** 당사의 수출제품 중 무역조건이 DAP(수입자가 지정한 창고에 입고기준) 조건에 해당하는 제품의 매출인식 시점은 기존에 선적기준일 기준으로 계상하고 해당 제품을 당사에 공급하는 거래처(당사기준 매입처)도 선적일 기준으로 매입마감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당사가 무역조건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게 하면서 DAP(수입자가 지정한 창고에 입고기준) 조건을 적용하게 될 예정인데, 당사에 납품하는 거래처의 매출액 인식 시점을 기존과 동일하게 당사 매출액 인식시점으로 계상해도 무방할런지 여부입니다.
즉, 기존 선적기준 조건과 같이 DAP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 A** 매출액 인식은 세법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반영하여야 하는데, DAP조건인 경우 창고에 입고되는 시점이 해당 재화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시점이며 매출인식시점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매출에누리 · 매출할인은 수익에서 차감하고, 세무상 과세표준에서도 제외된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기업은 매출증대와 발생한 매출의 조기 대금회수 등을 위해 여러 가지 거래방법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의 회계 및 세무처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매출에누리의 회계 및 세무처리방법

매출에누리는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시점부터 매출가액의 일부를 감액해주거나 판매물품의 수량부족이나 품질의 불량 · 파손 등의 이유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문단 16.5에서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다.

상기의 규정에 따라 매출에누리는 바용의 발생이 아닌 매출의 조정항목의 성격을 가지게 되며, 회계상으로 매출에누리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실무상으로는 매출에누리가 발생되면 해당 금액을 매출에누리 계정으로 반영한 후 기말결산시에는 매출에누리 계정 총액을 총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순매출액만을 매출액으로 반영하면 된다. 즉, 기말 결산시 매출에누리계정의 차변잔액을 매출계정의 차변에 대체하게 된다.

기업회계상 매출에누리를 수익에서 차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법에서도 매출에누리는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 · 소득세법에는 매출에누리를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공급가액에 매출에누리를 제외시키도록 하고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에 발생한 에누리는 부가가치세매출세액의 감액을 수반시키게 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① 거래시점부터 감액해주는 경우

(개당 100원짜리 제품을 12개 판매하면서 10개 대금만 받기로 한 경우)

차) 매출채권	1,100	대) 매출	1,000
		부가가치세예수금	100

② 제품판매후 불량발생하여 감액하기로 한 경우

▶ 제품판매시

차) 매출채권	1,100	대) 매출	1,000
		부가가치세예수금	100

▶ 제품불량에 따라 매출에누리 인식

차) 매출에누리	200	대) 매출채권	220
부가가치세예수금	20		

▶ 결산시

차) 매출	200	대) 매출에누리	200
-------	-----	----------	-----

매출할인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방법

매출할인이란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을 회수약정기일 전에 회수함으로써 회수일로부터 그 약정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상으로 매출할인도 매출에누리와 같이 상품, 제품의 총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의 계산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법인세법 시행령 §11)’고 하였으므로 매출할인액은 이자비용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도 2007년부터는 매출할인을 기업회계 및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매출에누리와 똑같이 처리하면 된다.

① 판매시점

차) 매출채권	1,100	대) 매출	1,000
		부가세예수금	100

② 회수시점(조기수금에 따라 할인)

차) 현금	1,045	대) 매출채권	1,100
매출할인	50		
부가세예수금	5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주택분 종부세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기본공제	2주택 이상 6억원 1주택자 11억원	9억원 12억원
세율	2주택 이하 0.6~3.0% 3주택 이상 1.2~6.0%	0.5~2.7% 다주택자 중과폐지
세부담 상한	150~300%	150%



R&D 세액공제율 비교

	대기업	중소기업
한국	최대 2%	25%
미국	7%	
일본	6%	12%
영국	13%	24.7%
독일	인건비 25%, 계약비 15%	
프랑스	30%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

업종	세부 기술
반도체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 · 제조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제조기술 등
이차전지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팩 제조기술,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부품 · 소재 · 셀 및 모듈 제조 기술 등
백신	방어 항원 등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원료 및 원부자재 개발 · 제조기술 등



주요 금융사 올해 주력상품

회사	상품	특징
KB국민은행	KB스타 정기예금	조건 없이 연 4% 이상 금리
신한은행	신한 알 · 쏠 적금	월 300만원 한도 자유롭게 관리
하나은행	하나원큐아파트론	비대면 초간편 주택담보대출
우리은행	우리 영업점명 적금	동네 맞춤형 우대금리 제공
농협은행	NH건고싶은 적금	국립공원 인증 시 최대 연 7.1%
IBK기업은행	중기 근로자 우대적금	연 5% 자유적립식 상품
부산은행	2030 부산월드엑스포적금	2만7000계좌 570억원 판매
대구은행	DGB핫플적금	GPS이용 핫플레이스 방문시 우대금리
삼성생명	간편 우리집 착한종신보험	유병자 상속세 · 자산 마련



일 잘하는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기술

1. 대화 : 내 편을 만드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생각 없이 뱉은 말 한마디가 당신의 평판을 좌우한다.

간단한 인사가 당신의 승진을 좌우한다. 밝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라.

칭찬은 성과로 돌아오지만, 험담은 반드시 비수로 돌아온다. 대화의 중심에 칭찬을 두라.

2. 보고 :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보고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여, 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 일이다.

아무리 보고의 내용이 훌륭하다고 해도 자세와 절차를 무시하면 좋은 평가를 기대할 수 없다.

3. 회의 : 의견을 관철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회사에서 회의는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의 지도를 그리는 자리.

회의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야, 업무를 당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자신 있게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의견에 대한 반응을 미리 예상하고, 각각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라.

4. 협상 :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때로는 살짝 양보해서 상대를 만족시켜라. 결국에는 상대방보다 크게 이겨라.

상대의 제안에 바로 답하면, 이미 진 게임이다. 답변을 유보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5. 영업 : 마음을 사고 서비스를 파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세일즈 능력은 이제 일반 비즈니스맨에게도 요구되는 자질이다.

영업의 목표는 제품이든 서비스든 무언가를 파는 것이다. 지갑보다 마음을 먼저 열어라. 꼭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을 보여주라.

6. 프레젠테이션 : 청중을 휘어잡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내용’ 만큼 중요한 것이 ‘형식’이다. 성향도, 관심사도 제각각인 사람들을 사로잡으려면 비주얼로 커뮤니케이션하라.

프레젠테이션을 재미있고, 열정적인 쇼로 만들어라.

최 신 판 례 예 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재산-626, 2022.02.25

■ 질 의

- 2021.1.1. 현재 주택 2채를 보유한 1세대가 먼저 취득한 주택(중전주택)을 별도 세대에게 부담보증여하여 양도로 보는 채무승계액 부분에 대해 비과세된 후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 중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후 양도하는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거주기간 계산방법은 기존 해석사례(부동산납세과-721, 2014.09.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납세과-721, 2014.09.23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같은 영 154조제1항제1호의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 규정을 적

용할 때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거주한 기간의 총족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자영예술가의 창작품 판매에 따라 발생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해당함

자영예술가인 화가가 자신의 창작품인 미술품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7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1877, 2022.03.30

■ 질 의

- 질의인은 생존한 작가로 서양화 작품을 1점당 6천만 원 미만으로 화랑에 판매*하였고
* 사업자등록 및 별도의 판매시설등 사업장을 갖추지 아니함
- 화랑은 작품대금을 질의인에게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함

질의

- 자영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서화)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 회 신

귀 사전답변신청 사실관계의 경우, 자영예술가인 화가가 자신의 창작품인 미술품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7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2018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고, 2019 및 2020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2019 및 2020사업연도에 대하여 투자제외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사전법규법인-232, 2022.03.30

■ 질 의

-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임
- A법인은 2018사업연도 귀속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제2호에 따른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였고,
 - 2019사업연도 귀속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투자포함방법을 선택 하였으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15항제1호에 따라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도 투자포함방법을 적용하였음
- A법인은 수정신고를 통해 아래와 같이 방법을 변경하고자 함

질의

- 2019사업연도 귀속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2020사업연도까지 적용한 내국법인임
- 2019~2020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를 통해 투자제외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이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 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

유예기간동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4조의2제2호의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란 해당 법인과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법규소득-7614, 2022.02.25

■ 질 의

- 소득령 27에 따른 의제배당의 계산 시,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할 때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요건 중 하나로서 일정한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 이 때 소액주주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규칙§14의2(2)는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음

질의

- 소득규칙 14의2(2)에 규정된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의미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4조의2제2호의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란 해당 법인과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주택분 중부세 120만명 돌파... 5년새 3.6배 증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사상 처음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주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대상자 역시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중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 2017년 과세 인원(33만2천명)의 3.6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주택분 중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천명, 2018년 39만3천명, 2019년 51만7천명, 2020년 66만5천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3만1천명까지 늘었다.

올해 중부세 고지는 이달 22일께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가 가계산한 현재 추산치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친 후 고지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추산치 대비 1만명 안팎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주택분 중부세 과세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과세 대상자들이 납부하는 주택분 중부세액 역시 2017년 4천억원에서 올해 4조원대까지 10배가량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태원 피해자 3개월 납부연장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를 받은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한다.

재해재난을 당한 납세자는 3개월간 납부가 직권연장되고,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6일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2022. 1분기),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9만3000명, 2793억 원)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 직권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부상자 가족 역시 3개월간 직권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 상 어려움이 큰 사업자

가 신청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수용한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131만명에 대해서는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별도의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는 홈택스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 추계액 신고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벤처 민간모펀드 200억원 투자면 세금 10억 원 감면...3% 추가 공제도

앞으로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 금액의 5% 이상을 세금에서 감면받고, 개인 투자자도 출자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국 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내국 법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해 간접 출자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민간 자금을 모아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 모펀드를 통해 투자할 때도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때 민간 모펀드는 출자 금액의 최소 60%를 의무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실제 투자금액이 이보다 더 크다면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감면해준다.

해당 법인이 투자 규모를 최근 3년 평균치보다 늘렸을 경우에는 증가분의 3%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예컨대 한 기업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 기업에 200억원을 투자했고,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이 100억원이라면 이 기업은 투자금액의 5%와 증가분(100억원)의 3%를 합쳐 13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출연금액의 10%를 세금에서 빼준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 국세청, 2022. 11.

- ◎ (개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납부기한*은 2022. 11. 30.(수)까지입니다.
 -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납부기한 2023. 1. 31.(화))
- ◎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2022. 1분기),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9만 3천 명, 2,793억 원)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2023. 2. 28.)합니다.
 -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022. 11. 30.(수)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 2022년 귀속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 납부

중간예납 대상자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0만 명입니다.
-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 연장자를 제외한 131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해당 사업자는 2022. 11. 30.(수)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고지내역 조회 가능(로그인 > My홈택스 > 고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붙임 1)

- ▶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
-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2022. 6. 30.이전 휴·폐업한 사업자 등

※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음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귀속)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 기준액)의 1/2이며,
 -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2023. 5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23. 6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세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1/2

$$* \text{중간예납기준액} = \text{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text{확정신고 납부세액} + \text{결정·수정신고 등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 \text{환급세액}$$

* 부동산매매업자는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함

중간예납 분납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023. 1. 31.(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 고지세액의 50% 이하 금액


| 중간예납 분납세액 예시 |

구 분	중간예납세액	11월 납부세액 (2022. 11. 30.)	1월 분납세액 (2023. 1. 31.)
사례 1	12,500,000원	10,000,000원	2,500,000원
사례 2	2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사례 3	35,000,010원	17,500,010원	17,500,000원

납부 방법

-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 *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 수납계좌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이용 불가]
-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붙임 2)

|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손택스 (모바일앱)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1. 과세구분에서 '고지분'을 선택 2. '납부할 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3. 전자납부시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 본인인증 필요	

- 분납하시는 분은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위의 방법으로 2022. 11. 30.(수)까지 납부하고,
 -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2023. 1. 31.(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2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납부기한 직권연장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및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 대상자(2022. 1분기),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 9만 3천 명(2,793억원)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2023. 2. 28.)합니다.

구 분		지 원 대 상
1	손실보상 대상자	·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관련 근거에 따라 영업손실(2022. 1분기)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 - 다만,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2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 태풍('힌남노')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모든 납세자 * (경북) 포항·경주시,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직권연장'에 대한 안내문과 함께 「납부고지 유예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 내년 2월 초, 직권연장된 납부기한의 고지서를 보내드리니 2023. 2. 28.(화)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대상인 경우에는 분납기한도 2023. 1. 31.(화)에서 2023. 5. 2.(화)로 자동 연장됩니다.
- 또한, 2022.10.29. 발생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부상자 가족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2023. 2. 28.)합니다.

신청에 의한 연장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 연장을 신청하시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최대 9개월간 연장 가능)
- ※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3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가능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¹⁾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상반기(2022. 1. 1.~ 6. 30.)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2022. 11. 30.(수)까지²⁾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1) 2022년 귀속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
- 2)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시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함(납부기한 직권 연장자 포함)

※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상반기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

업 종	직전 연도(2021년 귀속) 수입금액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3억 원 이상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1억 5천만 원 이상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	7천 5백만 원 이상

*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소득세법 시행령 §208)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방법

- 홈택스(컴퓨터)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홈택스 (www.hometax.go.kr)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중간 예납 추계액 신고
손택스 (모바일앱)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추계액 신고

- 전자신고 운영기간: 11. 1. ~ 11. 30. (매일 06:00 ~ 24:00)
- 전자납부 운영기간: 11. 1. ~ 11. 30. (매일 00:30 ~ 23:30)
- * 신용카드 납부 포함, 홈택스 및 일부은행 전자납부는 07:00~23:30

4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제공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제공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납세편의를 위해 11. 1.(화)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에 납세자에게 모바일로 고지서 배달을 사전 안내
-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모바일을 통해 고지서 배달상황1)을 확인하고 집배원과의 연락 및 수령희망장소2)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 접수, 발송, 배달준비, 배달완료 등 국세고지서 배송상황 확인 가능
 - 2) 경비실, 무인 우편물 보관함 등 수령희망장소 선택 가능

다만,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중간예납 고지서는 현관 앞, 기타는 선택 불가

사전 신청 필요

-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컴퓨터)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붙임6·7)
-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 ❶로그인 후 ❷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고 ❸개인정보 우정사업본부(제3자) 제공에 동의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송달되는 고지서와 관련한 정보를 모바일(우체국 알림톡)로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기 바랍니다.



붙임 1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

1. '22.1.1. 현재 비사업자로서 '22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소법 § 65①)
2. 다음에 해당하는 자(소득세 사무처리규정 § 76)
 - 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22.6.30.) 이전에 휴·폐업한 경우(휴업자 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와
 - 나.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3.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소령 § 123, 소칙 § 64)
 - 가.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 나.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21년 개정)
 - 다.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라.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 * 수시부과결정 :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
 - 마. 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 (1)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 (2)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 바.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 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 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 자.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주택법」 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4.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해당 납세조합원(소법 § 68)
5. 중간예납기간 중('22.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 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소법 § 65⑩)
6.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소법 § 86)

붙임 2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안내

구 분	주요 내용	
전자납부 (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예납 고지분을 전자납부하는 경우<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고지분' 선택- 중간예납 추계액 등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전자납부 가능 시간은 07:00 ~ 23:30○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이용시간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국민
	07:00~23:30	산업, 우리, 우체국, 상호저축, 신한
신용카드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근 방법 :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카드납부 시간 : 00:30~23:30(연중 무휴)○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 세무서는 업무시간(09:00~18:00)에 방문하여 납부 가능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 손택스 납부(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예납 고지분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고지분' 선택- 중간예납 추계액 등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전자납부 가능 시간은 07:00 ~ 23:30○ 금융결제원 모바일 지로 이용시간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국민
	07:00~23:30	산업, 우리, 우체국, 상호저축, 신한
금융기관 ·우체국에 직접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 방문 없이 중간예납고지서에 안내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분납)도 가능○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 시간 : 2022년 11월 30일(수)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중간예납 고지서(분납 시에는 직접 작성한 영수증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붙임 3 - 중간예납 고지서 및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 조회

홈택스

-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My홈택스」 선택
 - － 홈택스 첫 화면의 상단 좌측 「My홈택스」 버튼 또는 오른쪽 바로가기에서 「My홈택스」 선택
- 11월 중간예납 납부대상자(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되지 않은 납세자)는 ①「고지」 선택하여 중간예납 고지서 조회
 - － 중간예납 직권 연장 사업자(납부기한이 '23. 2. 28.(화)까지 연장)는 ②「우편물 발송 내역조회」 선택하여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 조회

손택스

-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 후 하단 「My홈택스」 누름
 - － 11월 중간예납 납부대상자(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되지 않은 납세자)는 ①「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누름 → 상단 중앙 「고지」 누름
 - － 중간예납 직권 연장 사업자(납부기한이 '23. 2. 28.(화)까지 연장)는 ②「우편물 발송 내역조회」 눌러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 조회

붙임 4 -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홈택스

1.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신청/제출' 클릭
2. '(좌측) 신청/제출' 클릭 후 하부 메뉴 중 '일반세무서류 신청' 클릭
3. '민원명 찾기'에 ①납부기한을 입력 → ②[조회하기] 버튼 클릭 →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구.징수유예) 신청의 신청구분 ③[인터넷신청] 클릭

손택스

1. 손택스(모바일앱)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신청/제출' 클릭
2.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클릭
3.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하부 메뉴 '일반세무서류 신청' 클릭
4. '민원명찾기'에 ①납부기한 입력 → ②[조회하기] 클릭 →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구.징수유예) 신청의 ③[모바일신청] 클릭

붙임 5 - 「고지서 배달 알림」 이용 신청방법

홈택스

○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신청방법

- ① 홈택스 접속 → ② 회원정보 클릭 → ③ 휴대전화번호 등록 (확인 및 수정) → ④ 개인정보
우정사업본부(제3자) 제공* 동의 → ⑤ 회원정보 수정

손택스

○ 손택스(모바일앱)를 이용한 신청방법

- ① 손택스 접속 → ② 메뉴 > 나의정보 > 회원정보 수정 → ③ 휴대전화번호 등록 (확인 및 수
정) → ④ 개인정보 우정사업본부(제3자) 제공* 동의 → ⑤ 회원정보 수정

붙임 6 - 중간예납 추계액 전자신고 안내

○ 홈택스(www.hometax.go.kr)의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1. 홈택스 접속 후 상단 메뉴 '신고/납부' 클릭
2. (우측)세금신고의 '종합소득세' 클릭
3.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클릭
4. 주민등록번호 '조회' 클릭 → (주소지 전화·휴대전화·사업장 전화 중 하나 이상 입력)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사유 선택 →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5.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작성 →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6. 신고서 작성완료

○ 손택스(모바일 앱)의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1. 신고/납부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2. 기본사항 입력 및 신고사유 선택
3. 종합소득세 산출근거 입력
4.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작성 및 제출



붙임 7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예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3. 13.>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① 상 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 명	김○○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주 소	서울 중로구 ○○○로 *** (전화번호: ****-****-****)		
⑥ 사업장소재지	서울 중로구 ○○○로 *** (전화번호: ****-****-****)		

중 세 간 액 예 계 납 산	⑦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 예납세액		⑧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납 부세액			⑨ 추 가 납 부 세 액		⑩ 중간예납기준액 (⑦+⑧+⑨)		
	500,000		1,000,000			0		1,500,000		
중 간 예 납 추 계 액 계 산	⑪ 중간예납기간(1 월~6월)의 종합 소득금액		⑫ 종합소득금액 연간환산액 (⑪×2)		⑬ 0월 결산금	⑭ 종합 소득 공제	⑮ 종합소득 과세표준 (⑮-⑬-⑭)	⑯ 산출세액 (⑮×세율)	⑰ 중간예납 산출세액 (⑮/2)	
	7,000,000		14,000,000		0	1,500,000	12,500,000	795,000	397,500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			
	⑱ 감면 세액	⑲ 세 액 공제액	⑳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㉑ 수 시 부 과 세 액	㉒ 원 천 징 수 세 액	㉓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계 (⑱~㉒)		㉔ 계 (⑱-㉓)	㉕ 분납할세액2 개월 이내)	㉖ 신고 기한 내 납부세액
	0	70,000	0	0	0	70,000		327,500	0	0
㉗ 신 고 사 유	● 「소득세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해당 연도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 6월 30일 현재 ㉔ 중간예납추계액 ÷ ㉕ 중간예납기준액 = 21.8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라 중간
예납추계액신고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11월 일
신 고 인 김○○(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종 로 세 무 서 장 귀 하

구비서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1부

작성방법

- ① 추가납부세액란: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 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국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② 이월결손금란: 기장(記帳)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
- ③ 신고사유란: 해당되는 ●안에 "V"표시를 하며,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㉙ 중간예납추계액 계를 ㉚ 중간예납기준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 기획재정부, 2022. 11

- 벤처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벤처투자 생태계에서 민간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였음
 - ※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에 포함
 - 출자-운용-회수 단계별로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지원
 - *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Fund of funds)
 - ① (출자)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5%* + 증가분의 3%** 세액공제
 - * $\text{Max}(\text{실제 벤처기업 투자금액, 모펀드 출자금액의 60\%}) \times 5\%$
 - ** $(\text{해당연도 벤처기업 투자금액} - \text{직전 3년 평균 벤처기업 투자금액}) \times 3\%$
 - ② (출자) 내국법인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출연금액의 10% 세액공제
 - ③ (출자) 개인투자자가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는 경우 벤처모펀드 출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④ (운용)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 공동운용사(자산운용사, 증권사)의 경우 벤처모펀드의 자펀드 출자분에 한하여 면제
 - ⑤ (회수) 개인 및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 *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및 부가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운용사
 - ⑥ 적격사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적격사모펀드의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적용
 - * 사모펀드 중 일정 요건(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 등)을 충족하는 사모펀드
- 이번 세제지원을 통해 개인 및 법인의 벤처투자 기반이 확대되고,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오늘 발표한 세제지원 방안은 조속히 입법화할 계획임
 -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화를 위한 벤처투자법령이 개정(~'22년말)되는대로 세법 개정안(❶, ❸, ❺)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항(❷, ❹, ❻)은 조속히 개정을 마무리 하겠음('23년초)

참고 1 -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관련 세제지원 방안

◇ 모펀드 등 벤처투자 관련 출자·운용·회수 단계별로 세제 지원

1 내국법인의 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 시 세액공제

- (현행) 내국법인의 벤처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5% 세액공제(「조특법」 §13의2)
 - * 전체 벤처펀드 출자 금액 중 실제로 벤처기업에 투자된 금액에 한하여 세제지원
- (개선) 내국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하여 벤처기업 등 투자 시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5%* + 증가분의 3%** 세액공제
 - * $\text{Max}(\text{실제 벤처기업 투자금액}, \text{모펀드 출자금액의 } 60\%) \times 5\%$
 - ** $(\text{당해연도 벤처기업 투자금액} - \text{직전 3년 평균 벤처기업 투자금액}) \times 3\%$
- 내국법인이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출연금액의 10% 세액공제

2 개인의 모펀드 출자 시 소득공제

- (현행) 개인투자자가 일반 벤처펀드 출자 시, 투자금액의 10%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조특법」 §16)
- (개선) 개인투자자가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모펀드 출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3 자산 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현행) 정부 벤처모펀드에 공급하는 출자 관리·운용 용역은 면세, 자펀드에 공급하는 투자 관리·운용 용역은 단독 운영사만 면세(「부가령」 §40)

- ☐ (개선) 민간 벤처모펀드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다만, 공동 운영사의 경우 출자 부분에 한하여 면세

4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투자 시 양도소득세·법인세 비과세

- ☐ (현행) 개인 및 창업투자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지분 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 §13·§14)
- ☐ (개선) 개인 및 민간 벤처 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 양도차익 비과세
*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및 부가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운용사

5 벤처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주식 투자 시 양도차익 비과세

- ☐ (현행) 적격펀드가 사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투자 시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소득령」 §26의2)
- ☐ (개선) 적격펀드가 벤처펀드(VC)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참고 2 - 현행 및 개선안 비교 (요약)

① 내국법인이 펀드 등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시 세액공제

출자대상	현행	개선
일반 벤처펀드	실제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5%	현행과 동일
민간 모펀드	-	실제 벤처기업 투자금액 ¹⁾ 의 5% + 증가분의 3% ²⁾

1) 모펀드의 경우 '실제 벤처기업 투자금액'과 '모펀드 출자금액의 60%' 중 큰 금액

2) (당해연도 벤처기업 투자금액 - 직전 3년 평균 벤처기업 투자금액) × 3%

② 내국법인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한 모펀드 투자 시 세액공제

출연목적	현행	개선
상생협력 목적 기금 출연	출연금액의 10%	현행과 동일
모펀드 투자 목적 기금 출연	-	출연금액의 10%

**③ 개인이 펀드 출자 시 소득공제**

출자대상	현 행	개 선
일반 벤처펀드	출자금액의 10%	현행과 동일
민간 모펀드	-	출자금액의 10%

④ 자산 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펀드 용역 공급자		현 행	개 선
정부 모펀드	공급자 : 한국벤처투자	O	현행과 동일
일반 벤처펀드	공급자 : 단독 운영사		
민간 모펀드	공급자 : 단독 운영사	-	O*
	공급자 : 공동 운영사		

* 다만, 공동운영사의 경우 출자 부분에 한하여 면세

⑤ 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 시 양도차익 비과세

출자대상	출자자·출자법인	현 행	개 선
벤처펀드	개인 및 창업투자회사 등	O	현행과 동일
	자산운용사·증권회사	X	
민간 모펀드	개인 및 창업투자회사 등	-	O
	자산운용사·증권회사	-	O*

* 창업투자회사·신기술금융업자와 공동운용사로 부가적으로 참여하는 자산운용사·증권회사

⑥ 적격펀드가 벤처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투자 시 양도차익 비과세

적격펀드	현 행	개 선
사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투자	O	현행과 동일
벤처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투자	X	O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원, 2022. 11

1 추진배경

- 금융감독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와 함께 각 권역별(은행 · 저은 · 상호 · 여전) T/F를 운영('22.5월~)하여
 -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능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한 개선과제(4개 부문 20개)를 마련하였습니다.

* 은행·중소서민 금전사고 : ('21년 상반기) 41건 226억원 → ('22년 상반기) 40건 927억원

- 동 과제는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 점검, 금감원 검사결과 및 주요 사고사례 분석 등을 기초로 각 업권별 T/F 논의를 거쳐 도출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중소서민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

(Control)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	
인사관리 등 기본 내부통제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순환근무·명령휴가제 실효성 제고(공통) ②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분리(공통) ③ 결재단계별 문서 등 검증체계 강화(공통) 	최근 사고분석을 통한 취약부문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PF대출 자금집행 관리 강화(저은·여전) ② 채권단 공동자금 검증절차 마련(은행) ③ 대출취급시 서류 진위확인 강화(저은) ④ 자동자금용 관리 강화(여전) ⑤ 예치금 이체시 책임자 승인(상호)
(Capability)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점감사 실효성 제고(공통) ③ 은행 자체 상시감시 체계 강화(은행) ⑤ 조합 감사조직 운영 내실화(상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준법감시 역량 강화(은행·저은·여전) ④ 중소형 여전사 내부감사운영 활성화(여전)
(Culture)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내부고발자 제도 실효성 제고(공통) ③ 교육 강화 및 캠페인 실시(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금융사고 예방지침 실질화(공통) ④ 자율적인 내부통제문화개선 유도(공통)
(Supervision) 사고예방 감독기능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내부통제 운영실태 검사등 강화(공통) ③ 조합 내부통제 수준 평가 및 활용도 제고(상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중요성 제고(공통) 	



- * 동 과제는 각 업권의 주요 과제를 종합한 것으로 업권별 별도 과제 추진 등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주요내용

가.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 (Control)

- 사고위험 직원에 대한 순환근무, 명령휴가제*,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단말기 접근통제 강화** 등 상호전제 및 사고예방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 예) <순환근무제> 예외 허용절차 강화, 예외 근무기간 한도 설정 등
 - <명령휴가제> 대상자 확대(위험직무 → 장기근무자), 강제명령 의무화 등
 - ** 예) 정기적 비밀번호 변경, 생체인증(지정맥 등) 방식 결제 등
- 또한, PF대출금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저은·여전), 채권단 공동자금 관리 강화(은행) 등 최근 각 업권별 금융사고에서 나타난 취약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통제를 즉시 강화*하겠습니다.
 - * (여전) 자동차금융에 대한 관리 강화, (상호) 대외예치금 이체시 책임자 승인 의무화 등

나.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 (Capability)

- 이해상충 방지장치 마련* 등을 통해 자점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준법감시조직의 인력 및 전문성 확충 등 금융회사의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은행·저은·여전)하겠습니다.
 - * 예) 자점감사자 취급업무에 대한 제3자 점검 강화 등
 - ** 예) 준법감시조직 역량 제고를 통한 준법감시인 권한 활성화 유도
- 아울러, 중소형 여전사(총자산 2조원 미만)에 '자율진단제도*'를 도입(여전)하고, 상호금융조합의 감사실 설치 대상 조합기준을 확대(상호)하는 등 금융회사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 리스크 취약 부문을 자율진단 과제로 선정하여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 및 개선

다.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Culture)

- 내부고발자 포상기준을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업권별 표준 '금융사고 예방 지침'을 마련(개선)하고, 사고예방 교육·캠페인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 이밖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작동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가 금융권에 정착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 예) 영국·호주·싱가포르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문화를 자체 진단 토록 하거나 감독당국이 평가

라. 사고예방 감독기능 확충 (Supervision)

- 금융회사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금감원(또는 상호금융중앙회)의 상시감시 및 사고검사를 강화하고,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비중 확대* 및 평가기준 구체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예) (은행) 내부통제 평가부문을 독립된 평가항목으로 분리(CAMEL-R → CAMEL-RIC)
(상호) 경영관리(M)부문 내부통제 비중 15% → 25%

- 아울러, 내부통제시스템이 영세한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평가모형을 개편*(상호)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지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예) 내부통제 환경·활동·효과 부문별 체계적 평가모형을 구축하고, 평가(1~5등급) 관대화 해소

3 향후 계획

- 금융회사 내규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연내 조속히 추진·시행하여 금융사고 확산을 방지하고,

- 그 외의 과제는 조직·인력 정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업권별 사정 등을 감안하여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금감원은 동 과제가 해당 업권의 특성에 맞게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개선과제별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 각 협회·중앙회와 함께 업권 모범사례 등을 공유토록 함으로써 내부통제가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 -

I 추진 배경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는 건전경영,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의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

* 「지배구조법」(§24)에서도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하도록 규정

- 그러나 내부통제 중요성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 금융회사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 관리 및 조직 문화 등은 여전히 미흡한 측면
- 최근 여러 금융회사의 거액 금융사고*는 기본적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



-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업권 협회(중앙회) 등과 함께 T/F를 운영*하여
- * 은행 및 중소기업(저은·여전·상호) 각 업권별로 금감원, 협회(중앙회) 및 금융회사 공동으로 구성된 내부통제 개선 T/F를 출범·운영
 -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 금감원 검사결과 및 주요 사고사례 분석 등을 실시하여 주요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모색
 - 특히,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 내부통제 기능이 '실효성 있게 제대로' 작동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논의하여 총 4개 부문 20개 개선과제(잠정)를 마련

➡ 동 과제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운영상 개선사항*으로 내규개정 등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여 금융사고 확산을 방지하고 시장신뢰를 조기에 회복

*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향은 현재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22.8월~)」 논의를 거쳐 추후 별도로 마련·추진할 예정

참고 1 - 은행 및 중소기업 권역의 최근 금융사고 주요 사례

- ① (은 행) M&A 계약금 횡령 (○○은행, '22.4월)
- (사고내용) 기업구조조정 자금관리 직원이 공·사문서 위조 등의 방법으로 장기간 동안 거액의 자금을 수 차례에 걸쳐 횡령
 - (발견경위) 외부 기관의 자금 반환추진 요청 과정에서 발견
 - ☞ (발생원인) ①경영진의 내부통제 관심 부족, ②사고자의 준법의식 부족, ③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직무분리, 명령휴가 등 사고예방기능 미작동 등 총체적인 내부통제 상 문제에 기인
- ② (저축은행) PF대출 관련 서류 위조 등을 통한 횡령 (○○저축은행, '22.3월)
- (사고내용) PF대출 담당직원이 장기간 PF대출 관련업무(영업·기표·송금)를 전담하면서,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중요증서(차주 전표통장) 도용 및 송금시 계좌주명 임의변경 등을 통해 PF대출금을 횡령
 - (발견경위) 감사실 자체 감사
 - ☞ (발생원인) 순환근무 및 직무분리 미흡, 중요증서 관리소홀, 송금 관련 전산시스템 취약(계좌주명 임의변경 가능), PF대출 자금집행진 점검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③ (여전사) 중고 상용차금융 등 대출사기 (○○캐피탈, '22.7월)
- (사고내용) 대출모집인이 판매점에 지급하여야 할 중고 상용차금융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허위 차량을 이용하여 딜러론 편취
 - (발견경위) 중고 상용차금융 명의자가 민원을 제기하여 인지
 - ☞ (발생원인) 명의이전 및 근저당 미설정진 점검 미흡, 대출관련 서류 진위 확인 등 소홀

- ④ (상호금융) 고객명의 무단 대출 후 횡령 (oo농협, '22.6월)
- (사고내용) 여신담당직원이 비트코인 등의 손실 만회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임의 변경하고 증빙서류 없이 대출을 실행하여 횡령
 - (발견경위) 고객의 제보로 인지
 - ☞ (발생원인) 사고자의 준법 · 윤리의식 부족 및 책임자의 장기간 여신서류 확인 소홀

참고 2 - 은행중소서민 권역의 내부통제 개선 T/F 운영 경과

- (구 성) 금감원, 각 업권별 협회 및 중앙회, 준법감시인 등 주요 금융회사 내부통제 담당자
- (목 적) 각 업권별 내부통제 운영현황 파악 및 개선과제 발굴
- (운영 기간) '22. 5월 이후 ~
- (논의 내용) 각 업권별 내부통제 운영실태 자체 점검, 금감원 검사결과 및 사고 위험도 분석 등을 통해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개선과제 발굴
- 우리은행 횡령사고 검사결과(잠정) 및 각 업권 내부통제 운영실태 자체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각 업권별 규모, 조직·인력 구성, 영업행태 및 사고유형 등을 고려하여 개선과제(초안)를 마련
- ⇒ ①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 ②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제고, ③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 ④사고예방 감독기능 확충 총 4개 부문 20개 과제(잠정)를 우선 도출

〈은행·중소서민 권역의 내부통제 개선 TF 운영현황(요약)〉

구 분	은 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구 성	금감원, 은행연합회, 주요 은행	금감원, 저축은행중앙회, 주요 저축은행	금감원, 여신금융협회, 주요 여전사	금감원, 4개 중앙회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중앙회)
운영 기간	'22.7월~	'22.5월~	'22.9월 ~	'22.5월~
주요 논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통제 개선 전략과제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및 세부 운영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전반(여수신, 내부통제절차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전사 내부통제 운영실태 • 여전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현황 • 내부통제 운영 실태 자체점검 결과 •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안 등



II

최근 금융사고 발생 동향 및 시사점

1 금융사고* 발생 동향

* 은행·중소서민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보고한 금전사고 기준

- (개 황) '22년 상반기중 은행·중소서민 권역의 금전사고는 40건, 927억원이며, 전년 동기 대비 1건 감소, 701억원 증가(각 2.4%↓, 310.2%↑)
 - * 최근 사고금액 추이(억원) : ('19년) 444 → ('20년) 553 → ('21년) 500 → ('22.上) 927
- (유형별) 횡령사고(28건, 747억원)가 상반기 금전사고의 대부분(금액 기준 80.6%)이며, 이는 최근 발생한 거액 횡령사고 등이 원인
- (업권별) 은행·중소서민 권역 모두 사고건수는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이나, 사고금액(은행 640억원, 중소 287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각 536억원↑, 165억원↑)

2 내부통제 운영상 취약점

1

상호견제 등 내부통제 기본기능 미작동

- 특정 직원이 장기간 동일 업무를 수행*하거나, 명령휴가제** 형식적 운영 등 내부통제의 기본인 상호견제 기능 미작동
 - * 출납 등 고위험업무 장기 수행자는 금융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
 - ** 예) 직원에 대해 예고 없이 명령휴가를 실시하고 해당 직원 업무를 감사
 - 또한, 수기문서에 대한 전산통제가 미흡*하고, 업무편의를 위해 직원간 비밀번호 공유 등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
 - * 예) 수기로 문서대장 작성, 문서의 전자등록과 상관없이 수기로 문서번호 부여 가능 등

2

준법감시 등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취약

- 인력 및 전문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없이 준법감시부서를 운영*하여 준법감시 인력·전문성이 부족하고, 실질적 통제효과 미미
 - *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11③) 금융회사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지원조직을 구성·운영하여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함
 - 또한,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자점감사자가 본인 업무를 점검하거나 감사실 직원이 여수신업무를 겸직하는 등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

3

임직원 준법·윤리의식 부족 등 기본원칙에서 벗어나는 조직문화

- 온정주의 및 업무편의주의 등으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는 등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 부족
 - 내부고발자 제도는 있으나 포상기준 미흡*, 동 의무 위반 시 사후조치 부재 등으로 운영 실적이 매우 부진
 - * 예) 직접적 사고적발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하고 있어 절차적 위반 사항 등 금전적 평가가 곤란한 신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포상기준 부재 등

참고 3 - 내부통제 주체별 역할 및 취약점

◆ 금융권의 내부통제상 문제점을 3선모델(3 Lines Model*)에 기반하여 재구성하면 각 내부통제 주체별로 다음과 같은 취약점이 도출

* 국제내부감사인협회(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의 내부통제 3선 모델 기반

- (1선 : 임직원) 임직원 스스로 내부통제의 주체라는 인식이 미흡하고, 내부통제를 등한시 하는 조직문화* 상존
 - * 예) 형식적 자점감사 수행, 책임자 ID/패스워드 공유, 순환근무/명령휴가 미 실시 등
- (2선 : 준법감시)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하여 일부 업무 프로세스 및 내부 관리체계가 취약
- (3선 : 내부감사) 내부감사 인력 등 인프라 부족*으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내부감사 활동 등을 통한 경영진 견제 기능이 미흡
 - * 예)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상임감사 등이 없거나, 감사 지원조직이 미흡한 사례 등
- (경영진 및 이사회) 내부통제 최종 책임자로서의 인식 부족* 및 구체적인 역할 및 책임**이 미비
 - * 내부통제를 비용만 유발하는 규제로 인식하여 관련 인력 확충 등에 소극적
 - ** 내부통제 관련 경영진·이사의 역할 및 책임 등 법적 근거가 부족



내부통제 운영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 기본 방향 〉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보다 견고하고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4개 부문*에서 20개 추진과제를 마련

* (Control)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 강화, (Capability)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 (Culture)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 (Supervision) 사고예방 감독기능 확충

금융사고 확산 방지 및 소비자 신뢰 회복

(Control)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

인사관리 등 기본 내부통제 기능 강화

- ① 순환근무·명령휴가제 실효성 제고(공통)
- ②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분리(공통)
- ③ 결재단계별 문서 등 검증체계 강화(공통)

최근 사고분석을 통한 취약부문 통제

- ① PF대출 자금집행 관리 강화(저은·여전)
- ② 채권단 공동자금 검증절차 마련(은행)
- ③ 대출취급시 서류 진위확인 강화(저은)
- ④ 자동차금융 관리 강화(여전)
- ⑤ 예치금 이체시 책임자 승인(상호)

(Capability)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

- ① 자점감사 실효성 제고(공통)
- ② 준법감시 역량 강화(은행·저은·여전)
- ③ 은행 자체 상시감시 체계 강화(은행)
- ④ 중소형 여전사 내부감사운영 활성화(여전)
- ⑤ 조합 감사조직 운영 내실화(상호)

(Culture)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

- ① 내부고발자 제도 실효성 제고(공통)
- ② 금융사고 예방지침 실질화(공통)
- ③ 교육 강화 및 캠페인 실시(공통)
- ④ 자율적인 내부통제문화개선 유도(공통)

(Supervision) 사고예방 감독기능 확충

- ① 내부통제 운영실태 검사 등 강화(공통)
- ②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중요성 제고(공통)
- ③ 조합 내부통제 수준 평가 및 활용도 제고(상호)

1 (Control)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

가. 인사관리 등 기본 내부통제 기능 강화

①

은행	저은
여전	상호

 순환근무제·명령휴가제 실효성 제고

□ (현 황) 순환근무제도에도 불구하고 예외허용 기준 미비* 등으로 특정 직원이 장기간 동일 업무를 수행하거나,

* 예) 직무순환 예외 허용 사유나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아 부서장 등 재량으로 직원 장기근무 가능

○ 명령휴가제 미 실시 또는 형식적 운영* 등으로 금융사고의 조기인지 기능 저하

* 예) 불시 명령휴가 대신 사고자가 예정한 휴가로 대체하여 운영

※ (OO은행 사례) 사고자가 10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동일 직무를 담당하였음에도 동 기간 중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음

※ (OO조합 사례) 사고자가 '10 ~ '20년중 고객의 저축성 보험금 등을 장기간 횡령하였으나, 조합에서 순환근무 및 명령휴가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적발이 지연

□ (개선안) 순환근무제도의 운영기준을 개선*하여 장기근무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체계 강화

* <은 행> 장기근무자 목표비율 관리, 예외허용절차 강화, 예외 근무기간 한도 설정 등
<저축은행> 내규화를 통해 순환근무제 원칙 도입, 예외허용 절차 마련 등
<상호금융> 운영주기 강화, 예외기준 정비 등

○ 명령휴가 대상 확대, 불시명령 시행 등 세부 운영기준을 강화하여 운영의 실효성 제고

※ 명령휴가제도 세부 운영기준(예시)

❶ (명령휴가 대상자) 위험직무뿐만 아니라 동일부서 장기근무자(영업점, 본부부서 모두)

❷ (강제명령 의무화) 위험 직무 등에 원칙적으로 강제 명령휴가 실시

- 위험업무 또는 장기근무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휴가 또는 파견시 점검 등 대체수단 허용

❸ (명령방식) '불시'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령휴가 전산 입력시간을 제한

- (예) 명령휴가 전일 오후 5시 00분~명령휴가 당일 오전 9시 00분 등

②

은행	저은
여전	상호

 고위험 업무 등에 대한 직무분리 등 접근통제 강화

□ (현 황) 직무분리, 통장인감 분리보관 등에 대한 기본원칙만 있고 관리기준이 없어, 사고 위험성이 있는 주요 업무(구조조정·IB 등)에 미적용



※ (OO은행 사례) 본부부서에서 통장·인감 관리직원을 분리하지 않고 동일인이 모두 관리함에 따라 횡령에 용이한 환경 조성

- 비밀번호 관리 소홀(통장·단말기 등에 비밀번호 부착 등), 업무편의 목적으로 비밀번호의 직원간 공유 등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

※ (OO카드 사례) 동료직원의 ID/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 신용카드의 한도를 부당하게 증액하여 사용

※ (OO조합 사례) 사고자 단말기에서 타행계좌송금을 위한 전산승인을 요청하고 지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지점장의 ID/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횡령

- (개선안) 직무분리·중요증서 분리보관에 대한 판단기준 및 관리기능 구축, 준법감시부 모니터링 등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

※ 직무분리 세부기준(예시)

① (분리대상 필수직무) 직무분리(겸무제한) 대상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자율로 운영하되, 필수직무를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명시

* (예) 일반대출 : <Front> 대출영업 <Back> 서류 진위확인, 심사, 기표, 송금지급 등
여신심사 : <Front> 여신심사 <Back> 감정평가사 및 법무사 지정 등

② (관리시스템 운영) 직무분리 대상거래 및 담당자를 시스템에 등록

③ (정기점검 실시) 직무분리 운영현황을 자점감사 및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정기점검 실시

- 책임자 또는 직원간 ID와 비밀번호 공유를 차단하기 위한 접근통제 강화 방안 마련

※ 접근통제 강화 방안(예시)

① (접속방식 변경) ID/비밀번호 방식 운영시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거나, 시스템 접근방식을 본인인증(신분증, 핸드폰 등) 또는 생체인식 방식으로 고도화

② (전산적 차단장치) 단말기 IP주소와 담당직원을 연동하여 다른 단말기에서 로그인할 수 없도록 제한 등

③

은행	저은
여전	상호

결재단계별 문서 등에 대한 검증체계 강화

- (현 황) 자금인출(이체)시 결재단계별* 검증기능이 취약하여 단계별 정보가 상이하더라도 결재가 되는 등 사고위험에 노출되는 사례

* 기안(자금인출요청서 등) → 직인 날인 → 지급

- 특히, 수기문서 내용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거나, 외부수신 문서의 전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고취약점 존재

※ (OO조합 사례) 출금전표 및 대외발송 공문의 내용이 결재문서 내용과 상이함에도 그대로 직인이 날인됨으로써 횡령사고를 발견하지 못함

- (개선안) 결재 단계별 거래 확인 및 통제기능을 의무화*하여 핵심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자금이체 제한

* 예) <은 행> 직인날인 및 자금지급시 기안문서 번호, 금액 등 핵심내용 일치여부 확인 등

<저은·여전> 결재시 지출결의서 등 관련증빙 확인, 준법감시부서 등 점검 절차 마련

<상호금융> 지출결의서 작성(신청)과 집행내역간 상호검증 등

- 수기 기안문서 전산등록 의무화 및 외부 수신문서 등의 문서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통제절차

* 마련

* 예) <은 행> 수기기안문서 전산 등록 의무화, 외부수신문서 검증 강화 등

<저은·여전> 수기문서 및 외부수신문서의 전산등록 의무화, 준법감시부서 등 점검절차 마련

<상호금융> 시제금 검사결과표의 전산 입력·승인 등 전산 통제방안 마련

나. 최근 사고분석을 통한 취약부문 통제 강화

①

저은 여전

PF대출 자금집행 관리 강화

- (현 황) PF대출에서 영업·자금집행 직무 미분리, 자금인출요청서 검증 미흡 등 자금집행 단계의 취약점을 악용한 사고사례 발생

※ (OO저축은행 사례) PF대출 담당직원이 PF대출 영업·기표·송금업무를 전담하면서, 송금시 계좌주명 임의변경,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중요증서(차주 전표·통장) 도용 등을 통해 PF대출금 횡령

- (개선안) 직무분리, 지정계좌 송금제 도입, 전산시스템(송금) 개선 및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대책 등 마련

※ PF대출 자금집행 관련 사고예방 대책(예시)

- ❶ (직무분리) PF대출 영업업무, 기성고에 따른 대출기표(승인)업무, 자금송금업무 담당부서(또는 담당자) 분리
- ❷ (수취인명 임의변경 차단) 송금시 수취인명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송금시스템 개선
- ❸ (지정계좌 송금제) 사전 등록된 지정계좌(신탁사·거래처 계좌 등)로 PF대출금이 입금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지정계좌 등록·변경시 사전 확인절차 강화
- ❹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대책) 회사 공용메일 등을 통한 자금인출요청서 수신, PF 대출금 송금시 차주 앞 문자발송, PF대출 잔액 정기통지 등



②

은행

채권단 공동자금 정기검증 절차 마련

- (현 황)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자금에 대한 자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채권단이 확인하는 절차가 없음

※ (OO은행 사례) 워크아웃 기업 매각진행 과정에서 몰취한 계약금을 관리하던 사고자가 자금 관리 현황을 확인 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횡령

- (개선안) 기업구조조정 관련 채권단 공동자금의 경우 자금관리 적정성에 대한 채권단 정기검증 절차를 마련토록 의무화

③

저은

대출취급시 제출서류 진위확인 강화

- (현 황) 대출 취급시 진위확인이 곤란한 증빙서류(입출금 거래 내역서 등) 허용 및 진위확인 소홀(→대출사기 위험 노출)

※ (OO저축은행 사례) 일부 차주가 작업대출 조직이 위조해준 소득관련 서류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취급

- (개선안) 대출증빙은 진위확인이 가능한 자료(전자세금계산서<국세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등)를 원칙으로 하고*,

* 진위확인 가능 서류는 담당자가 반드시 진위확인 이행(예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력 조회)

- 진위확인이 곤란한 서류가 예외적으로 제출된 경우 추가 확인절차*를 의무적으로 실시

* (예시) ① 해당기관에서 자료를 팩스로 수신하거나 직접 유선통화

② 차주 제출서류에 대해 현장방문 또는 제3자 통화 등으로 재확인

④

여전

자동차금융에 대한 관리 강화

- (현 황) 중고 상용차대출은 여전사가 대출금을 대출모집인을 거쳐 판매점에 지급*하고 있어 대출모집인의 대출금 편취 위험에 노출

* 상용차는 승용차 대비 대출금액이 크고 차량 명의이전에 일정기간이 소요되어 차주에게 직접 입금시 용도의 유용 등 발생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다수의 자동차대출 보유 등 명의대여* 개연성이 있는 고객에 대한 대출 취급 시 소득 증빙서류의 진위 등 확인 소홀

*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 등을 대신 납부하고, 렌트카 수익금을 분배해준다고 피해자를 기망

※ (OO여전사 사례) 대출모집인이 판매점에 지급하여야 할 중고 상용차금융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허위 차량을 이용하여 딜러권 편취
(OO여전사 사례) 렌트카사업자가 렌트카 사업의 수익금을 제공하겠다고며 명의 대여를 요구한 후 동일인에 대하여 여러 건의 할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편취

- (개선안) 대출금 지급방식 개선*, 대출금 지급 증빙자료 징구의무 부과, 근저당 미설정 건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통제장치 강화 추진
- * 예) 에스프로 계좌를 활용한 대출금 지급 등
- 특정 시기에 다수의 자동차대출을 실행한 고객 등에 대해서는 기 보유 차량 실사용 여부, 대출서류 진위여부 등 확인절차를 강화

⑤

상호

대외예치금 이체시 책임자 승인 의무화

- (현 황) 상호금융조합 실무직원이 책임자 전산승인 없이 단독으로 예치금 이체 업무수행 가능 등 자급집행 통제기능 미흡

※ (OO조합 사례) 사고자가 공인인증서 USB, OTP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조합명의 대외예치금 계좌에서 책임자 승인없이 본인 계좌로 임의 송금하여 횡령

- (개선안) 대외예치금 이체시 책임자 전산 승인('단계별 승인') 방식을 도입하도록 사고예방지침 등에 반영 의무화

2. (Capability)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

①

은행

저은

여전

상호

자점감사 실효성 제고

- (현 황) 자점감사자가 지점 내 고위험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어, 본인 업무를 본인이 점검하는 등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
- 또한, 일부 사고취약 업무가 자점감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거나 자점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

- (개선안) 자점감사자 취급업무에 대해 제3자가 점검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자점감사 대상 항목*을 개선

* 예) <저은> PF대출 자금집행, 고액 경비·자본예산 집행, 중요실물 관리실태, 고객 원장변경



등 추가

<상호> 일일 자점감사 항목에 시재금 점검 포함 등

- 또한, 자점감사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행실태 부실 부점에 대한 페널티 강화, 취약점에 대한 개선절차 등 마련

* <은행·저은·여전> 준법감시부서에서 점검, <상호> 중앙회에서 점검

②

은행
여전 저은
상호

준법감시조직 역량 및 책임 강화

- (현 황) 준법감시조직은 충분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인력으로 적정 규모*를 갖추어야 하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질적 효과가 미미

*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11)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지원 조직을 구성·운영하여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함

- 준법감시 인력·전문성 부족이 준법감시 업무의 양적·질적 수준이 저하되어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

- (개선안) 준법감시조직의 인력 및 전문성 확충 등 금융회사의 자체 내부통제 역량 강화*

* 예) <은행> 준법감시조직의 인력 및 전문성 확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 준법감시조직 역량 제고를 통해 준법감시인 권한 활성화 유도

<저은> 준법감시조직의 충분한 인력확충 유도, 법규준수실태 점검강화 등

<여전> 금융사고예방 모범규준에 준법감시 인력 확보방안 반영

③

은행

은행 자체 상시감시 체계 강화

- (현 황) 은행은 이상거래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본점 업무는 상당수 제외되어 있고, 주요 사고 관련 모니터링 지표*도 미흡

* 은행명의계좌 고액 출금거래, 타발송금(해외로부터 들어온 송금)을 사전지정계좌 외 다른 계좌로 지급 등

- 중요 이상거래에 대한 보고·처리 절차가 미흡하고, 대부분 담당자 등이 종결하는 등 감시 기능에 한계

- (개선안) 상시감시 대상에 본부 부서 업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위험 이상거래 추출시 보고·처리 절차 체계화

④

여전

중소형 여전사 내부감사 운영 활성화

- (현 황) 중소형 여전사(총자산 2조원 미만)의 경우 내부통제 취약요인에 대한 자체진단 및

자율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부재

* 카드사 및 대형 여전사에 대해서는 내부감사협의제도 운영 중

- (개선안) 중소형 여전사에 '자율진단제도*'를 도입하여 취약부문에 대한 자율시정 기능 및 내부감사 역량을 강화

* 예) 금감원과 여전사가 상호 협의하여 리스크 취약 부문을 자율진단과제로 선정한 후 자율진단 체크리스트에 따라 해당 여전사가 자체적으로 점검·개선 후 결과 제출

⑤

상호

상호금융조합 감사조직 운영 내실화

- (현 황) 상호금융조합의 내부감사 인력 등 인프라 부족*으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감사활동 등을 통한 경영진 견제 기능이 저하

* 예) 감사조직이 없거나 감사실 직원이 일선업무를 겸직하는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 인력이 부족

** '22.3월말 기준 927개 조합(41.8%)만 감사실을 설치

- (개선안) 상호금융조합의 감사실 설치대상 조합 기준을 확대하고, 감사담당 직원의 독립성* 확보방안 등 마련

* 예) 원칙적으로 겸직 불가 및 소형조합의 경우 여수신 업무 등 금융사고 우려 업무 겸직 금지

3. (Culture)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

①

은행
여전

저은
상호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제도 실효성 제고

- (현 황) 내부고발자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부고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절차가 없는 등 운영 부진

* '21년중 은행 및 중소서민 업권의 금융사고 관련 내부고발 포상금 지급실적은 1건에 불과

**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11) 위법·부당행위 인지후 회사에 미제보시 불이익 부과 필요

- (개선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고발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사절차 구체화** 등 체감도 제고

* 예) 직원 자체 발견을 계기로 금융사고 적발시 내부고발로 간주하여 적극적인 포상 실시, 금전적 평가가 곤란한 제보에 대한 포상방안 마련 등

** 예) 자체감사시 내부자 고발의무 위반을 필수 감사항목으로 운영 등



②

은행
여전 저은
상호

「금융사고 예방지침」 실질화

- (현 황) 기존 '금융사고 예방지침*'은 대부분 법규 내용만 언급하는 등 원론적인 수준으로 구체성이 결여되어 사고예방 실효성 미흡

* 업권별 표준화된 사고예방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업권내 금융회사별 편차 존재

- (개선안) 사고예방 대책(명령휴가, 순환근무, 고위험업무 직무분리 등) 및 사고보고 절차, 직급별 역할·책임 등을 체계화한 '금융사고 예방지침' 마련*

* 예) <은행> 영업 특성을 고려한 부점별 금융사고 예방지침 구분, 사고예방 활동의 업무별·직급별 역할·책임의 명확한 명시 등(개선)

<저은·여전> 사고예방을 위한 금융사고 예방지침 업계 표준안 마련

<상호금융> 신탁·농협·수협·산림 등 업권별 「금융사고 예방지침」 마련(개선)

※ 금융사고예방지침 표준안(예시)

- ① (범죄행위 방지대책) 명령휴가제, 고위험업무 직무분리 등에 대한 세부운영기준 명시
- ② (금융사고 재발방지 대책) 사고예방교육, 지침 실효성 정기점검 및 최신화 의무부과
- ③ (이행사항 자체검사) 단위업무·직급별 점검사항 마련, 자점감사, 준법감시부서(또는 감사부) 점검, 명령휴가자 특명검사 실시 등
- ④ (업무상 고객정보 이용기준 등) 직급별·업무별로 조화권한 차등부여, 마케팅 동의서 內 명시된 정보만 이용 등

③

은행
여전 저은
상호

임직원 교육 강화 및 캠페인 실시

- (현 황)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 축소 등으로 최근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대한 사고 예방* 교육 실적이 저조

* 예) 금융사고 발생 사례 및 관련 내부통제상 취약점 전파,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 교육

- (개선안) 임직원의 준법·윤리의식 제고 및 사고예방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 강화* 및 캠페인 실시**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

* 예) <공통> 연수·의무교육 기회 확충, 책임자 중심의 내부통제 교육 강화 등

** 예) <공통> 전산시스템 접속시 팝업 안내, 지도공문 발송시 캠페인 문구 삽입, 위법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 운영 등

④

은행
여전 저은
상호

자율적인 내부통제문화 개선 유도

- (현 황)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사고예방 관련 법적 요건은 준수하고 있으나,

- 이사회(경영진)의 인식 부족, 재무성과 위주의 보상체계, 통제조직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내부통제문화의 조성 및 정착은 미흡*

*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경영진(이사회)의 노력, 내부통제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규율하는 체계 정립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내부통제문화가 중요

- (개선방향) 금융회사 내부통제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강구

※ 내부통제문화 개선 유도방안(예시)

- ①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내부통제문화 등을 평가하여 개선토록 하는 방안
 - (호주건전성감독청) 경영실태평가 제도(PAIRS)의 평가항목에 해당 금융회사의 리스크 문화(Risk Culture) 및 준법의식(Compliance Culture) 포함
 - (싱가포르 통화감독청) 금융회사의 리스크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진행
- ② 업권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문화를 평가하여 자율개선토록 하는 방안
 - (영국) 금융서비스문화 위원회(FSCB), (아일랜드) 아일랜드 은행업 문화위원회(BCB)
 - 설문조사 등으로 조직문화를 평가·분석하고 결과를 제공하여 금융회사 자율개선 유도

4. (Supervision) 사고예방 감독기능 확충

①

은행	저은
여전	상호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검사 등 강화

- (현 황) 금융사고 조치, 내부통제 적정성 점검 등은 대부분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 금융회사 내부통제 역량 부족 등으로 감독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 (개선안)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련 검사 및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적시성 있는 사고대응 및 수시점검* 실시

* 예) <은 행> 거액 금전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고에 대한 금감원 현장검사 확대 등

<저은·여전> 금감원 현장검사시 금융사고 부문 집중 점검, 내부통제 개선방안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

<상호금융> 순회감독역† 운영의 내실화 추진(중앙회 인력확충, 불시점검, 산림조합에 제도 도입 등)

† 중앙회 계약직으로 현금시재 및 예치금 관리 등 조합의 금융사고 취약 부문을 점검



②

은행
여전저은
상호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중요성 제고

* (은행) CAMEL-R, (중소) CAMEL

[자본적정성(C), 자산건전성(A), 경영관리능력(M), 수익성(E), 유동성(L), 리스크(R)]

- (현 황) 현행 경영실태평가지 내부통제 부문은 경영관리(M) 아래 한 부문으로 포함되어 평가비중이 낮고*, 평가항목도 일부 추상적

* 경영관리 부문 비중 : (은행) 15%, (저축은행) 20%, (여전·상호) 15%

- (개선안) 내부통제 중요성에 대한 금융회사의 인식 제고 및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평가비중 확대 및 평가기준 구체화 등 개편*

* 예) <은 행> 내부통제를 독립된 평가항목으로 분리, 평가비중 확대, 종합등급 연계 강화 등

<저은·여전> '금융사고 부문'에 대한 평가항목 확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구체화 등

<상호금융> 내부통제 부문의 평가비중 확대 및 종합등급 연계 강화 등

※ '금융사고' 관련 평가기준 구체화(예시)

(기존) 사고보고 및 처리의 적정성

(개선) · 금융사고 발생시 사고수습, 처리 및 사고보고가 적정하였는지 여부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외부의 금융사고나 자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취약한 점을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이 적절한 지 여부

③

상호

중앙회의 조합 내부통제 수준 평가 및 활용도 제고

- (현 황) 상호금융중앙회는 정기적(연 또는 반기)으로 개별 조합('22.6말 2,217개)의 내부통제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나, 평가 관대화* 및 활용도 저조**

* 1등급(우수) ~ 5등급(위험)으로 평가중이나, '21년 중 1개 조합만이 4등급(취약)으로 평가

** 평가결과 취약조합에 대해 '개선계획 징구' 외 별도 조치방안이 없음

- 특히, 내부통제 환경 · 활동 · 효과 등 다양한 부문별로 체계적인 평가모형을 구축해야 하나, 자점감사 실시 등 활동부문 위주로 운영

- (개선안) 조합의 내부통제 수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모형을 구축하고,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방안* 등 마련

* 예) 조합의 경영평가에 내부통제 평가결과 반영, 고위험 조합에 대해서는 검사대상 선정시 반영, 경영진 면담 등 조치 강화 등

IV 향후 계획

- 금융회사 내규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연내 조속히 추진·시행하여 금융사고 확산을 방지
 - 그 외의 과제는 조직·인력 정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업권별 사정 등을 감안하여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
- 아울러, 금감원은 동 과제가 해당 업권의 특성에 맞게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개선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 각 협회·중앙회와 함께 업권 모범사례 등을 공유토록 함으로써 내부통제가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

참고 4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은행·중소서민금융)

추진과제	세부 내용	권역	시행시기*
1 (Control)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			
가. 인사관리 등 기본 내부통제 기능 강화			
① 순환근무제·명령휴가제 실효성 제고	· 순환근무제 운영기준 개선 · 명령휴가제 세부 운영기준 강화	공통	'22.4Q
② 고위험 업무 등에 대한 직무 분리 등 접근통제 강화	· 직무분리·중요증서 관련 세부 운영기준 마련 · 단말기 등에 대한 접근통제 강화	공통	'23.1Q
③ 결재단계별 문서 등 검증체계 강화	· 결재 단계별 거래 확인 및 통제기능 의무화 · 수기기안문서 등 검증절차 마련	공통	'23.1Q
나. 최근 사고분석을 통한 취약부문 통제 강화			
① PF대출 자금집행 관리 강화	·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 대책 등 마련	저은 여전	'22.4Q
② 채권단 공동자금 정기검증 절차 마련	· 자금관리에 대한 채권단 정기검증 절차 마련	은행	'22.4Q
③ 대출취급시 제출서류 진위확인 강화	· 원칙적 진위확인 가능 서류 징구	저은	'22.4Q
④ 자동차금융 관리 강화	· 자동차금융 대출금 지급방식 개선 등 통제 강화 · 명의대여 의심 고객에 대한 확인절차 강화	여전	'23.1Q
⑤ 대외예치금 이체시 책임자 승인 의무화	· 대외예치금 이체시 책임자 전산승인 방식 의무화	상호	'22.4Q



② (Capability)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

① 자점감사 실효성 제고	· 자점감사자 이해상충 방지장치 마련 등 · 자점감사에 대한 적정성 점검	공통	'22.4Q
② 준법감시조직 역량 및 책임 강화	· 준법감시조직 인력 및 전문성 확충 등	은행 저은 여전	'23.2Q
③ 은행 상시감시 체계 강화	· 고위험 이상거래 추출시 보고절차 체계화 등	은행	'22.4Q
④ 중소형 여전사 내부감사 운영 활성화	· 중소형 여전사 자율진단제도 도입	여전	'23.1Q
⑤ 상호금융조합 감사조직 운영 내실화	· 감사실 설치대상 조합기준 확대 등	상호	'22.4Q

③ (Culture)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

① 내부고발자 제도 실효성 제고	· 포상기준 개선 및 고발의무 위반 확인 강화 등	공통	'22.4Q
② 금융사고예방지침 실질화	· 업권별 금융사고예방지침 개선·마련	공통	'22.4Q
③ 임직원 교육 강화 및 캠페인 실시	· 사고예방 교육 강화 및 캠페인 실시 등	공통	'22.4Q
④ 자율적인 내부통제문화 개선 유도	· 다양한 내부통제문화 개선 유도방안 강구	공통	중장기

④ (Supervision) 사고예방 감독기능 확충

①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검사 등 강화	· 적시 사고대응 및 수시점검 활성화	공통	'22.4Q
② 경영실태평가지 내부통제 중요성 제고	· 내부통제부문 비중확대, 평가기준 구체화 등	공통	'23.2Q
③ 조합 내부통제 수준 평가 및 활용도 제고	· 내부통제수준 평가모형 개선 및 활용 강화	상호	'22.4Q

* 시행시기는 추진 목표로 업권별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동 과제는 각 업권의 주요 과제를 종합한 것으로 업권별 별도 과제 추진 등 차이가 있을 수 있음